

코스피 2625.05 (-22.03)	코스닥 853.75 (-13.65)
금리 (국고채 5년) 3.364 (+0.024)	환율 (원·달러) 1331.00 (-0.10)



02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 한발 빼 공정위 “원점 재검토”

플랫폼 경쟁촉진법 과연 공정한가

〈中〉 정부 입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사전' 단어에 역차별 반발 거세

기준 회피 위해 각종 편법 예상
플랫폼 분야 경쟁력 약화 우려
공정위 "추가 의견 수렴할 것"

"법 제정이 더 늦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달 24일 플랫폼경쟁촉진법(플경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보인 소신이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경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설 연휴 전 공개, 의원 입법으로 4월 총선 전까지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추진력이 떨어진 데다 일부 내용에서는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특히 플랫폼업계사업자협회, 컨슈머 워치, 벤처기업협회 등은 역차별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이 같은 규제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플경법의 주된 내용은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행 공정

거래법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이런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할 경우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 호밍(중소사업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제한·최혜대우 등 4대 반칙을 할 경우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게 주 목표다.

좋은 의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일각에선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방식을 두고 즉각 반발이 일었다. 공정위는 사업자 매출과 시장 점유율 등의 기준을 통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이라는 단어에 역차별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지배 사업자 사전 지정해 규제한다
고?…“무슨 말이야” 역차별 논란↑

업계 전문가들은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놓고 위법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위 같은 사후규제기관의 역할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다면 시장 지배력 평가 등의 사후 규제는 건너뛰고 사전규제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게 국내 플랫폼 기업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며 “투자 위축, 플랫폼 생태계 몰락 등 경제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MWC 2024 개막

26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2024 모바일 월드 콩гр레스'(MWC)가 열려 방문객들이 삼성전자 전시관 주변을 지나고 있다. 2024 MWC는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관련기사 3면) AP/뉴스

보조금 개편에 친환경차 할인경쟁 점화

中 LFP 배터리 장착 車 보조금 축소
車업계, 수요둔화 우려에 몸값 낮춰

'EQC400·e-tron·I-PACE·아이
온닉EV·코나EV.'

지난 2020년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된 모델들이다. 당시 수입차 모델의 경우 대부분 1억원에 육박하는 등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중형 모델임에도 5000만 원대의 가격대를 형성했다. 당시 고가의 모델임에도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다.

그러나 4년여 만에 국내 전기차 시장

의 흐름은 바뀌고 있다. 전기차 수요둔화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으로 국산·수입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할인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완성차 업체는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저가형 모델 출시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5500만 원 미만에 전기차에 보조금 100% 지급,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자 현대차·기아, KG모빌리티(KGM)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물론 테슬라,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도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다.

KGM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토レス EVX의 가격을 200만원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기아도 전기차 할인에 합류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구매 혜택을 최대 7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중 차량 가격 할인만 120만원이다. 기아는 EV6, EV9, 니로 EV, 봉고 EV에 대한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EV페스타를 진행한다. 차종별 제품 할인액은 EV6 300만원, EV9 350만원, 니로 EV 100만원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업계 첫 D램칩 12단 적층 성공 삼성, 5세대 HBM 상반기 양산

'36GB HBM3E 12H D램' 개발
전작대비 성능·용량 50% 개선

삼성전자가 더 높은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 소식을 알리며 경쟁력 우려를 불식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6GB(기가 바이트) HBM3E(5세대 HBM) 12H(12단 적층)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올 상반기 양산할 예정이다.

이번 5세대 HBM은 D램 칩을 TSV로 가장 높은 12단까지 적층하는데 성공했다. 초당 최대 1280GB의 대역폭과 현존 최대 용량인 36GB를 제공해 성능과 용량 모두 전작인 HBM3(4세대 HBM) 8H(8단 적층) 대비 50% 이상 개선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적층에 필름 방식인 '어드밴스드 TC NCF(열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기술을 사용했다.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HBM 적층 수가 증가하고, 칩 두께가 얇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휘어짐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단 적층 확장에 유리하다.

SK하이닉스가 MR-Muf로 발열 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삼성전자가 차세대 기술 개발에 실패했다는 우려가 있었



지만 삼성전자는 필름 방식을 고도화해 12단이면서도 8단과 동일한 높이로 구현해냈다.

NCF 소재 두께도 줄였다. 업계 최소인 '7um(マイクロ미터)'를 구현했다.

HBM3 8단 제품보다 20% 이상 수직 집적도를 높였다. 특히 칩과 칩 사이를 접합하는 공정에서 신호 특성이 필요한 곳은 작은 범프를, 열 방출 특성이 필요한 곳에는 큰 범프를 목적에 맞게 사이즈를 맞춰 적용했다. 크기가 다른 범프 적용을 통해 열 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율도 극대화했다.

또 삼성전자는 NCF로 코팅하고 칩을 접합해 범프 사이즈를 다양하게 하면서 동시에 공극(Void) 없이 적층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도 선보였다.

/김재웅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與, 민주당 공천 논란에 “이재명 호위
무사에 하사하는 전리품”

▲ ‘尹사단 비판’ 이성윤 징계위 재개…
李 “어떤 결론도 원천무효”

▲ 野, ‘서울시 이승만 기념관’에 “차라리
을 사오적 기념관까지 만들라”

▲ 국회의원 후원금 작년 374억원… 1인
당 1억2400여만원 모금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국회 국
토위 통과

▲ ‘불법 자금·돈봉투 의혹’ 송영길, 총선
앞두고 보석 신청

/사진 뉴시스